

위험사회에서 세계시민주의로: 올리히 벡의 (기술)위험 거버넌스 전망과 한국의 사회학*

박희제**

[논문요약]

올리히 벡은 과학기술과 제도에 의해 매개된 위험을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설명해왔다. 이 논문은 벡의 위험사회론이 세계위험사회론과 세계시민주의로 발전하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소개하고, 한국 사회학계가 벡의 개념과 이론을 수용해 한국사회의 위험을 어떻게 이론화하고 경험적으로 연구해왔는지를 살펴본다. 1990년대 일련의 대형 사고와 재정위기가 발발하며 한국 사회에 대한 성찰적 조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위험사회라는 개념은 한국 사회를 분석할 새로운 개념과 이론을 찾고 있던 사회학자들에게 중요한 이론적 도구를 제공해 주었다. 한편 한국의 사회학은 위험사회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경험에 비추어 위험사회론에 역사적 맥락성을 부여하면서 이론의 수정을 추진했다. 반면 그의 후기 이론체계인 세계위험사회론이나 세계시민주의 개념은 아직 한국 사회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과학기술학의 최근 연구들을 기초로 한국 사회학이 세계시민주의적 시각에서 한국 내부와 국제사회를 연결시켜 글로벌 위험을 분석하는 방안으로 규제정책의 글로벌리제이션 연구, 지식의 수행성과 미래 예측의 지식정치 연구, 그리고 위험정치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주제어: 위험사회, 세계시민주의, 기술위험, 위험 거버넌스, 수행성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3087).

** 저자: 박희제(경희대학교 사회학과)

I. 들어가는 말

2014년 봄 세월호 참사와 함께 한국사회의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어진 원전 고장과 부품비리에 관한 뉴스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안고 살고 있으며 동시에 이에 둔감한 사회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우려 속에 경제와 성장의 논리와 안전과 위험배분의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의 충돌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갈등의 전선을 형성해왔고, 따라서 위험의 생산과 분배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위험 거버넌스의 문제가 한국 사회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고압선로의 전자파 위험을 둘러싼 밀양에서의 갈등이나 원전건설을 둘러싼 삼척 주민투표를 둘러싼 논쟁은 수많은 사건사고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아직도 위험 거버넌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현대사회의 주요 위험의 특징은 그것이 자연재해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발전소나 송전탑이든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든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과 제도에 의해 매개되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은 곧 그것을 생산하고 통제하는 사회제도의 문제이자 현대사회의 핵심을 관통하는 문제가 된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은 바로 이러한 현대사회의 성격을 설명해온 대표적인 학자다. 1986년 출간된 그의 저서 『위험사회: 새로운 현대성을 향하여(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는 같은 해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맞물려 학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1990대 초 그의 저작들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위험사회”는 시대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한국 사회학계에도 1990년대 초반부터 위험사회론이 소개되어 왔으니 근 20년 동안 벡의 개념과 이론이 논의되어 온 셈이다. 특히 199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일련의 대형 사고를 연달아 경험하면서 한국 사회학계의 관심사가 민주화와 계급/계층 중심에서 위험, 환경, 삶의 질로 급격히 확장되어 나갔고(임현진 외, 2002), 그만큼 벡의 위험사회론 역시 한국의 사회학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벡의 위험사회 개념과 위험사회론이 활발히 소개되고 인용되는 것과 그것이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나아가 한국 사회의 위험 거버넌스 구축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벡의 위험사회론은 1970-1980년대 서유럽의 복지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아무리 중요한 사회학적 개념과 이론이라도 그것이 배태된 사회적 배경과 한국 사회의 차이가 클 경우 그 이론은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역으로 어떤 이론이 한국 사회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성격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그 이론을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어찌면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데 있어 한 이론의 가치는 이론자체의 문제만큼이나 한국의 사회학계가 그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울리히 벡이 지난 30여 년간 발전시켜온 이론체계가 한국 사회학계에 어떻게 수용되어왔고 나아가 역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그의 이론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후의 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다음 절은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제기한 쟁점과 주장들을 간략히 설명한 후, 그

가 어떻게 세계위험사회(global risk society),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에 대한 논의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켜왔는지를 논의한다. 다음 그동안 윌리엄 벡의 개념과 이론들이 한국 사회학자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활용되어 왔는지를 논의한다. 이때 논의는 이론에 대한 소개나 이론 자체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보다 명시적으로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적·경험적 연구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벡의 개념과 이론이 한국 사회학계에 수용된 방식에 대해 평가하고, 그의 세계시민주의적 전망에 기초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안한다.

II. 위험사회론에서 세계위험사회와 세계시민주의로

1. 위험사회론

벡은 어떤 학파에 속한 학자가 아니라 다양한 사상들을 절충해 자기만의 색깔을 입힌 사회이론가다. 그의 이론은 하버마스의 담론이론, 루만의 제도주의, 데리다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중간 어디에 위치시킬 수 있겠지만 뚜렷이 어떤 하나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Bronner, 1995). 다만 그의 이론체계가 사회구조의 모순과 위기를 위험사회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모순 극복을 위한 행위주체로 성찰적 개인을 설정하며, 성찰적 근대라는 미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벡은 마르크스에서 프랑크푸르트학파로 이어지는 비판이론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한상진, 2008b).

1980년대 후반 올리히 벡은 위험사회라는 독창적인 개념을 들고 나오며 유럽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회이론가로 떠올랐다. 위험사회론은 1986년 출간된 벡의 『위험사회』를 시작으로 1990년에 출판된 일련의 저작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특히 『위험사회』는 벡의 대표작이자 그의 이론체계를 섭렵하고 있다. 사실 이후 그가 추구해온 개념적, 이론적 발전방향은 대부분 『위험사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에서 벡은 과학기술과 산업화를 통해 자연을 정복하고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고 동시에 이 물질적 부의 분배가 사회제도의 중심이 되는 초기 근대사회로부터 새로운 시대로 전환을 맞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위험사회라고 이름붙인 이 새로운 시대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산업화를 통해 만들어진 위험을 누가 어떻게 정의하고 분배(회피)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해결이 사회제도의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 즉 위험 거버넌스가 후기 근대사회의 특징을 결정하는 것이다.

『위험사회』와 일련의 초기 저작에서 벡은 먼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개념화하고 이 위험의 성격을 논의한다. 그러나 사회이론으로서 벡의 위험사회론이 갖는 가치는 새로운 위험의 성격에 대한 정의 자체보다 이러한 위험의 성격으로부터 출현하는 문제들과 이를 둘러싼 갈등을 현대사회의 제도들과 연결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험사회론의 핵심은 위험사회를 근대 산업사회의 성공이 낳은(비의도적인) 결과로 인식하는 것인데, 벡은 위험사회의 위험을 지진이나 폭풍우 같은 자연적인 재난이나 위해(danger)와 구분하면서 새로운 위험의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벡에게 위험은 자연적 재난과 대비되는 것으로 성공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manufactured risks)”이며 근대화 과정의 급진화로 인해 초래된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변화

의 산물이다(Beck and Willms, 2004: 115). 화산재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근대사회에서의 자연적인 대기오염을 보여준다면 공장굴뚝과 자동차에서 만들어지는 매연은 부의 생산과 편리를 위해 근대화(산업화) 과정이 만들어낸 대기오염을 보여준다. 즉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파생된 위험이자 경제적 유용성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기술적·경제적 결정(techno-economic decisions)”의 산물이다(Beck, 1992: 98).

여기서 백이 위험사회가 접하는 위험을 근대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개념화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위험사회의 대표적인 위험사례인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원자력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과학자들의 성공적인 연구와 이를 발전소의 형태로 가시화한 엔지니어들의 성취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위험이다. 즉 위험사회의 위험은 과학기술과 산업화가 고도로 발전해 산업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역설적으로 위험사회는 근대의 실패가 아니라 근대의 급진화가 낳은 결과이다.

그런데 위험이 결정을 수반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회제도의 정당성에 큰 위협이 된다. 대표적인 것이 과학기술이다. 계몽주의에 입각한 근대 정치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주권에 기초한 대의정치와 공화정을 발전시켰다. 국가의 정당성은 국민 개개인의 직·간접적인 참여에 의해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 의해 확보된다. 반면 과학기술은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가져다주는 힘의 원천이라는 서사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 그 결과 과학기술은 대중의 참여나 그들의 대표자로부터의 관리와 통제로부터 자유로웠고, 과학과 진보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과학기술 전문가주의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

의 발전으로부터 파생된 위험은 이러한 정당성의 근간을 위협한다. 따라서 위험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위험이라는 “문제의 해결책의 원천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으로 간주되기 시작한다(벡, 1997: 249).

둘째, 위험사회의 위험은 인간의 즉각적인 인식능력을 벗어나고 따라서 과학지식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다. 태풍과 같은 전근대사회의 재난이나 도시오물과 같은 산업사회의 위하는 사람들의 감각기관으로 분명히 감지된다. 그러나 방사능이나 식품에 첨가된 오염물질은 감각기관으로 잘 감지되지도 않을뿐더러 그 효과도 즉각적이지 않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낙진이 북유럽의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킬 때 그것을 감지하는 것은 사람들의 감각기관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과학지식과 측정도구라는 것이다.

한편, 이처럼 위험사회의 위험이 감각기관에 의해 즉각적으로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이 사회적으로 구성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문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불러오는 언론은 물론, 위험의 유무와 허용기준을 정하는 과학기술자와 법 전문가는 위험사회에서 핵심적인 사회-정치적 집단이 된다(벡, 1997: 57). 특히 과학기술은 위험의 생산자이자 그 위험을 정의하는 지식정치의 핵심적인 권력기관이다. 대표적인 예는 환경운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서로 상충하는 전문적인 위험평가 결과는 현대 환경운동의 선행조건이다(Beck, 1996: 10). 대표적으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살충제라는 화학의 산업화 결과가 지구의 생태계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에 대해 경고하면서 특정한 과학에 맞서는 저항과학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 과학기술의 개입을 통해 환경운동은 석유 유출 사고나 산업 폐기물로 인한 하수 오염처럼 가시적이고 가해자가 분명한 위협뿐 아니라 기후변화나 유전자변형식품처럼 일반 대중이 직접 인

지할 수 없고 때때로 그 위협에 영향을 받는 개인들에게 평생 아무런 해를 미치지 않고 후손들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협들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험사회에서 위협을 정의하는 권력기관들은 일반대중들에게 도전받는다. 무엇보다 과학지식의 발전이 과거 과학지식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과학이 제시하는 위협정의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회의도 커져가고 동시에 과학적 지식이 진리와 위협정의를 독점하는 데 대한 대중의 저항이 커진다. 또 과학의 성공은 극단적인 전문화를 낳고 세분화된 전문성은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현장에 적용될 때 파생되는 이차적 결과들을 더욱 계산하기 어렵게 한다. 전문성이라는 과학기술의 원리가 급진화되면서 전문가들이 위협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능력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오히려 전문가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다. 즉 과학의 실패가 아니라 과학의 성공이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과학을 회의하게 만든다.

또한 위협의 실재성과 위협정의의 괴리는 위협을 관리해야할 제도들의 무책임을 낳는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를 들어보자. 1908년 미나마타에 화학공장이 설립된 후 중금속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미나마타 만 주변 주민들 중 첫 환자가 보고된 것은 1956년이었고, 이것이 과학적 연구를 거쳐 일본 정부가 중금속에 오염된 해산물 섭취로 인한 병으로 공식 인정한 것은 무려 12년이 지난 1968년이 되어서였다. 이처럼 위협의 실재성과 위협정의가 괴리를 일으키는 동안 위협에 노출되어 고통 받는 환자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위협이 무엇이고 어떻게 출현했는지 설명할 수 없는 과학, 기업, 국가는 이들의 고통에 책임지지 않는 조직적인 무책임이 발생한 것이다.

셋째, 위험사회의 위협은 지구화의 경향을 보이며 보편성을 띤다.

체르노빌 폭발사고로 초래된 방사능 낙진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북유럽 지역을 강타하고 피폭당한 피해자뿐 아니라 후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가난한 이들뿐 아니라 부유한 권력자들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 역시 전지구를 실험장화한 성공적인 과학 기술과 산업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벡 역시 산업단지 주위의 값싼 지역에 사는 가난한 주민들이 다양한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위험사회론에서 벡이 강조하는 위험은 산성비로 인한 황폐화된 숲이나, 방사능 낙진, 아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식품의 유해물질 같은 것들로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술·환경위험들이고, 이러한 예를 통해 그는 위험분배의 유형과 논리가 부의 분배와는 체계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한다. “빈곤의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라는 은유는 위험의 보편적 성격에 대한 벡의 견해를 잘 드러난다(벡, 1997: 77).

위험사회에서 위험의 보편성은 위험사회와 계급사회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한 개인의 위험노출 정도를 나타내는 위험지위가 그 개인의 계급적 지위와 다르다는 인식은 위험정치 역시 기존의 계급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계급정치가 각 계급이 계급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이해관계에 기초해 부의 분배를 놓고 다투는 것이라면, 위험정치의 주체는 계급이 아니라 대규모의 위험에 노출된 모든 개인들이다(송재룡, 2010). 현대산업사회는 노동, 여가, 가족, 성의 영역에서 개인화를 심화시키고, 개인들은 위험사회가 드리우는 위험에 대한 ‘불안’이라는 공통의 동기에 의해 연대하고 정치적 행동에 나선다. 위기의식은 현대사회의 제도들에 대한 성찰성을 낳고 과학, 국가, 정치에 의해 제도화된 안전 약속을 신뢰할 수 없는 개인들은 과거 비정치적인 영역이었던 환경이나 건강위험을 정치의 장으로 만드는 하위정치(subpolitics)를 실천

하는 것이다(Beck, Giddens, and Lash, 1994).

백은 비록 근대성의 부정적인 부산물인 위험이라는 개념으로 현대사회를 규정하지만, 그는 근대성의 기반이 된 계몽의 프로젝트를 부정하거나 전통사회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반근대론자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위험사회에서 사회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본다. 그의 목표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근대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Beck, 1995: 17). 백은 위험사회를 성찰적 근대성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모습을 보인다. 성찰적 사회는 “더 이상 자연을 이용하거나 인류를 전통적 제약들에서 해방시키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기술-경제적 발전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도 관심을 갖는 사회이고, 과학과 진보에 대한 믿음보다 반성과 회의에 기초한 사회다(백, 1997: 53).

2. 세계위험사회론과 세계시민주의 전망

백의 개념과 이론은 “위험사회”라는 담론을 확장시키며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호응을 받아왔다. 동시에 그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도 상당수 이루어졌다. 일례로 그의 위험사회론이 위험사회 또는 성찰적 근대화를 사회의 보편적 발전 궤적으로 그리며 각 사회의 다양한 발전과정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은 백 역시 위험사회론의 한계로 인정하고 있는 바다(Beck and Willms, 2004). 이 외에도 위험에 대한 노출이나 대처능력이 집단별, 사회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거나, 그의 위험개념이 구성주의적 시각과 객관주의적 시각을 혼용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대표적이다(Marshall, 1999; Mythen, 2004).

2000년대에 들어와 백은 위험사회론을 발전시켜 세계위험사회론을 전개하며 동시에 세계시민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한다(백, 2010,

2011; Beck, 2005, 2006a, 2006b). 이것은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그가 발전시켜온 위험사회론의 주장 중 일부를 강조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것이다. 비록 ‘글로벌’ 위험을 강조한다는 점은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근대성의 성공, 즉 노동의 합리화나 전문화 같은 근대성의 기본원리들의 급진화가 초래한 결과로 본다는 점에 위험사회론의 핵심 명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벡, 2010; 한상진, 2008a). 이러한 이론의 발전과정에서 벡이 위험사회론에 대한 학계의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벡의 후기 이론에서의 강조점과 변화는 크게 다섯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세계위험사회론은 벡의 이론이 다루는 위험의 종류에 변화를 가져온다. 위험사회론에서 그의 초점은 체르노빌 원전사고나 보팔 폭발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이나 유독물의 인체 잔류로 인한 환경위험이었다. 또한 『위험사회』 직후 1990년대에 영어로 출간된 저작들(Beck, 1992, 1995)에서 벡은 위험사회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생태 계몽주의(Ecological Enlightenment)”나 “생태정치(Ecological Politics)” 같은 용어를 즐겨 사용했고, 따라서 미국 사회학계에 벡의 위험사회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이들이 환경사회학자들이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Bronner, 199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구적 환경위험에 집중된 위험사회론은 빈곤, 실업, 금융위기, 범죄, 부정부패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위험을 포괄하는 사회이론을 구축하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노진철, 2010: 97)

반면 세계위험사회론은 위험사회론에 비해 위험의 범위를 크게 확장한다. 벡은 위치와 장소를 규정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으며, 보상할 수 없다는 특징을 중심으로 글로벌 위험을 정의하는데(벡, 2010; Beck, 2006a), 이러한 특징에 부합되는 예로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환경위험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험이나 글로벌 테러위험 같은 사뭇 다른 성격의 위험으로 탐구의 소재를 확장해 나간 것이다. 또 이처럼 위험의 종류가 확장되면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주요 행위주체들도 과학기술 전문가와 개인(일반시민)에서 국민국가, 세계 금융기구, 다국적 기업, 비정부기구 등으로 확대된다. 결과적으로 세계위험사회론을 통해 위험사회론이 갖고 있던 환경사회학적인 성격은 희석되고 현대사회의 주요 제도들의 모순에 대한 비판사회학적 성격은 강화되었다.

둘째, 벡은 세계위험사회론에서 위험에 대한 구성주의적 입장을 강화한다. 물론 위험사회론에서도 벡은 인간의 감각으로 지각되지 못하는 위험의 성격 때문에 위험이 사회적으로 구성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하면서 위험정의를 둘러싼 지식정치를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위험개념이 실재론적인 위해(danger)와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규모 위해를 당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노진철, 2010: 93-98). 세계위험사회론에서 벡은 위험을 명시적으로 위험정의(the definition of risks)의 문제라고 선언하며 방법론적으로 구성주의적 입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Beck and Willms, 2004: 136). 이제 위험은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재앙의 '예견'으로 정의된다(벡, 2010: 30). 수면상승으로 물에 잠긴 섬나라나 테러 희생자들의 사진과 같은 연출을 통해 기후변화나 테러와 같은 미래의 가능성(위험)이 현실성을 얻게 되고, 실제로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소거래시장이나 강화된 검문검색과 같은 실제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벡은 여전히 위험의 물질성을 부정하는 강한 구성주의적 입장과는 거리를 두면서 소위 제도적 구성주의적 입장을 옹호한다.

세계위험사회론의 초점은 단지 현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 ‘자체’가 제도적인 결정과 행위, 노동 맥락에서 (재)생산되는가”라는 질문이다(벡, 2010: 165). 즉 벡의 관심은 위험의 ‘연출’ 자체라기보다 전문가, 법, 정치 제도처럼 불확실한 미래 예측과 위해의 통제를 담당하는 현대사회의 제도들이 위험정의를 제도화하고 또 그 과정이 대항 지식에 의해 도전받고 정치화되는 모습이다.

셋째, 유사한 맥락에서 벡의 세계위험사회론은 위험의 문화적 인식차이를 강조한다. 위험문화(culture of risks)는 “우리가 어떤 유형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어떤 절차로 위험을 인정하고 또 위험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규정”한다(한상진, 2008a: 153). 세계위험사회론에서 위험문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시대적인 변화의 차원이다. 즉 근대사회에서는 위험의 정의가 전문가와 국가에 맡겨져 있었다면 세계위험사회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위험을 정의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위험을 정의하는 지식의 위계질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국제적 테러와 같은 글로벌 위험을 정의하는데 있어 전문지식의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과거 위험정의에 있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던 전문가들의 지식과 일반시민들, 특히 실제 위험의 피해자들의 지식과 경험이 평등한 발언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또 다른 차원은 국가별 위험문화의 차이이다. 각 국가의 역사적, 제도적 경험에 따라 특정 위험에 대한 민감성이 달라지는데, 특히 위험을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없을수록 같은 위험이 국가와 문화별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평가되고 각각 다른 정도로 사실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커진다(벡, 2010: 34). 일례로 유럽의 경우 기후변화

나 유전자변형식품 같은 환경위험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에 기초해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히스테리적인 반응으로 격하한다. 하지만 테러에 대해서는 미국이 유럽보다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국가별 위험문화의 차이는 위험의 사회적 구성성을 잘 드러내는 동시에 초국가적인 위험 거버넌스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처럼 벅은 위험문화의 차이와 충돌을 세계위험사회의 주요 특성으로 강조하고 위험사회의 사회적·역사적 맥락화를 강조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전근대 → 근대 → 성찰적 근대'로 이어지는 보편적이고 단절적인 발전과정을 가정하던 위험사회론으로부터 후술할 세계시민주의론으로의 전환을 잘 보여준다.

넷째, 세계위험사회론은 위험사회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성과 위험의 불평등을 강조한다. 위험사회론에서도 위험지위에 관한 논의를 통해 위험의 불평등한 분배가 다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적, 계급적 경계를 넘어서는 위험의 보편적인 성격이 이론의 전개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러한 위험의 보편성에 대한 논의는 위험사회론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도록 한 일등공신이지만, 동시에 위험의 계급, 인종, 젠더, 지역, 국가별 불평등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위험의 위계적인 불평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Marshall, 1999).

반면 세계위험사회론은 글로벌 위험의 보편적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집단별, 국가별로 달라지는 상황에 주목한다. 나아가 이러한 위험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의 차이를 국가 내에서나 지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권력관계의 산물로 파악하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불평등과 갈등을 분석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벅, 2010: 308-310). 가난한 국가가

경험하는 글로벌 위험의 불평등은 두 가지 차원이 중첩되어 있다. 하나는 공간적인 차원으로 남북관계에 따른 위험 불평등의 국제적 위계질서에 대한 인식이다. 벡은 이를 상류-하류 불평등이라는 은유로 설명하는데, 산업주의를 펼치는 강 상류의 부유한 국가들은 위험의 생산국이지만 동시에 강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듯 산업화의 부작용인 위험을 강 하류의 가난한 국가들로 전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강 하류에 위치한 가난한 국가들은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위험을 수용하게 되는 반면, 강 상류의 경제선진국들은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책을 세울 동기가 약해진다(벡, 2010: 287-290).

다른 하나는 시간적 차원과 중첩되는데, 아직 산업화가 덜 진행된 주변부 국가들은 한편으로 현대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험의 국제적 위계질서에 의해 글로벌 산업화의 부작용은 이미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벡, 2010: 322). 이는 후에 논의할 압축적 근대화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 역시 위험사회론이 서구 중심의 단선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발전론을 상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이론 수정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세계위험사회론은 글로벌 위험의 대두로 나타난 정치적 결과로 세계시민주의의 확산을 강조한다. 여기서 세계시민주의는 복잡한 상호의존으로 얽힌 세계와 지구적 규모로 제기되는 공동의 위협(common threats)에 대한 성찰적 인식이 공동책임과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세계주의적 규범과 함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벡은 이를 철학적 의미의 세계시민주의와 구분하여 제도화된 세계시민주의(*institutionalized cosmopolitanism*)라고 이름 붙인다(Beck, 2006b: 23). 그러나 글로벌 위험 자체의 성격에 따라 자동적으로 세계시민주의가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시민주의는 글로벌

위험에 대한 세계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만 고양된다. 이 과정은 글로벌 위험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담론 갈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위험갈등은 기존의 위험관리 질서를 뒤 흔들고 새로운 위험 거버넌스 제도를 요구하는 계몽의 효과를 갖는다(백, 2010: 112). 지구기후변화를 글로벌 위험으로 정의해낸 1992년의 리우 회담이 그 대표적 예다(Beck and Willms, 2004: 141). 세계시민사회의 전망은 개별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글로벌 위험을 맞아 위험 예방과 위험 통제라는 지구 공동의 이해관계를 탐색하고 이를 구속력 있게 제도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또한 국제적인 위험 불평등과 갈등에 대한 논의는 곧바로 사회학이 방법론적 일국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를 벗어나야 한다는 규장으로 발전한다. 세계위험사회에서 위험이 국경을 넘나들고, 세계적인 글로벌한 권력관계에 의해 불평등하게 분배되며, 국민국가뿐 아니라 글로벌한 다국적 기업과 시민단체들이 위험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학은 위험의 결정자와 그 결정에 따른 피해자 사이의 경계 그리고 영토적·경제적·사회적 경계의 불일치에 주목하고, 동시에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권력과 대항권력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론적 세계시민주의(methodological cosmopolitanism)로 나아가야 한다(한상진, 2008a; Beck, 2006b).

세계시민주의는 세계위험사회론이 비판이론으로 자리매김하는데도 중요하다. 세계위험사회론은 세계시민주의의 전망에 따라 위험결정의 위험과 편익을 모든 국가와 지역이 비교적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규범성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세계위험사회론은 이러한 규범적 당위성에 기초해 사회의 모순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와 대안을 모색하는 비판이론의 전통을 계승하는데(한상진, 2008b), 방법론적 세계시민주의는 이를 위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필수적이며 제도화된 세계시민주의는 하위정치와 사회운동이 새로운 위험 거버넌스 제도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통로가 된다.

Ⅲ. 한국 사회학계의 벡의 개념과 이론 수용

앞서 지적했듯 1990년대 반복되는 대형 사고의 여파 속에 울리히 벡이 주창한 위험사회라는 화두는 이후 한국 사회학계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 왔다. 벡에 대한 한국 학계의 관심은 그의 저서에 대한 번역물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97년 『위험사회』(홍성태 역)와 『사랑은 지독한 혼란』(배은경·황정미 역)이 번역되었고, 이후 『성찰적 근대화』(임현진·정일준 역, 1998), 『정치의 재발견』(문순홍 역, 1998),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홍윤기 역, 1999), 『지구화의 길』(조만영 역, 2000),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정일준 역, 2000), 『글로벌 위험사회』(박미애·이진우 역, 2010), 『세계화 시대의 권력과 대항권력』(홍찬숙 역, 2011)이 잇달아 번역되었다. 또한 2008년과 올 해 두 차례의 방한에서 벡 스스로도 다수의 대중 강연과 한국 학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 사회학계와의 접점을 만들어 갔다.

물론 벡의 위험사회론이 한국사회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홍균(2009)은 위험이 성찰을 낳는다는 벡의 이론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가해지는 성장을 향한 사회적 압력

(성장의 사회압력)이 성찰을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고, 따라서 성찰성의 확산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송재룡(2010) 역시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백의 개인화 테제가 특정한 사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언어적·문화적 차원의 의미를 무시하고 개인과 사회를 탈맥락화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노진철(2010)은 백의 위험사회론은 위험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노정할 뿐더러 생태적·기술적 위험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고 있는 불확실성의 원리를 분석하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이 이론적 관점에서 백의 이론을 논의한 것인 반면, 많은 학자들은 이를 한국사회의 성격을 이해하고 경험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개념틀로 수용한다.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백의 개념과 이론을 논의한 연구들은 크게 압축적 근대화의 경험이 누적시킨 위험에 대한 논의,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를 하위정치와 연결한 논의, 그리고 위험인식과 위험지위에 대한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백의 이론이 광범위한 만큼 이 세 가지 논의가 백의 개념과 이론을 이용한 연구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학 밖의 연구들이나 젠더 분야의 연구들이 생략되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살펴볼 백의 개념과 이론의 수용현황은 기술위험과 환경위험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 위험의 복합성과 위험사회의 역사적 맥락화

앞서 언급했듯 백의 위험사회론이 한국 사회학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이론 자체의 매력 이상으로 대구지하철 방화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1990년대 중반

발생한 일련의 대형 사고들과 1997년 금융위기가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많은 한국 사회학자들이 위험을 한국사회의 핵심적 특징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같은 맥락에서 현대사회를 진단하고 분석한 벡의 위험사회론이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앞서 소개했듯 벡의 이론에 비판적인 논의도 꾸준히 있어 왔지만, 대체로 한국의 사회학자들은 현대성의 성취에 따른 부산물로서의 위험이라는 위험사회론의 핵심적인 논의가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를 규정하는 거대이론들로서 위험사회론을 수용한 학자들은 벡의 개념과 이론이 서구와 다른 한국의 독특한 발전경험과 이로 인한 위험의 복합적 성격을 설명할 수 없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한다. 따라서 이들은 벡의 위험사회론이 지닌 서구중심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그것을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는데 복합위험사회(장경섭, 1998), 돌진형 근대화(한상진, 2008b; Han, 1998), 이중위험사회(Kim, 1998)라는 개념들이 대표적이다.

벡의 위험사회론을 한국사회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들로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회학자는 아마도 한상진일 것이다. 그러나 한상진 역시 위험사회론의 핵심적인 개념들이 한국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과 동아시아의 발전경험이 서구의 발전경험과 다르고 또 각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 위험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돌진형 발전(rush-to development) 전략을 취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돌진형 발전은 빠른 경제개발만을 지상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사회 안전을 희생시키고 부정부패의 만연을 가져왔다. 벡의 논의를 빌려 한상진은 1990년대의 수많은 사건사고를 우연한 재난이 아니라 이러

한 돌진적 근대화와 기술관료적 합리성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사회구조적인 위협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돌진적 근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국경을 초월하는 위협과 국내적인 위협이, 산업사회의 위협과 후기산업사회의 위협이, 그리고 객관적인 위협과 성찰적인 위협이 동시에 출현하고 있어 어떤 의미에서 서구보다 위협사회론이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사회다(한상진, 1998, 2008b; Han, 1998).

유사하게 장경섭은 한국사회가 20세기 후반 사오십 년 동안 서구세계가 이삼백 년에 거쳐 경험한 근대화를 압축적으로 이루었다는데 주목하면서, 이러한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이 초래한 한국의 사회구조적 딜레마로 복합위험사회를 설명한다. 한국사회는 백이 말한 선진국형 위협 외에도 후진국형, 한국특유형 위험요인이 혼재하는 복합위험사회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성장지상주의 정치이념과 사회분위기는 '선성장, 후안전' 기조를 고착시켜 여전히 후진국형 재해가 빈발하게 만들고 있고, 속도효율에 집착하는 압축적인 산업화 과정은 납기단축과 공기단축을 최고의 성과지표로 간주해 안전사고 역시 압축적으로 폭증하는 한국특유의 위협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장경섭, 1998; Chang, 1999).

한편 한상진과 장경섭이 압축적 근대화과정에서 상이한 근대성이 중첩되는 현상에 주목했다면 김대환은 근대화의 분야별 진전 정도의 차이를 강조한다. 그는 근대화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화, 민주화와 시민참여를 통한 정치적 안정, 합리적 가치체계의 사회적 정착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면서 세 차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서구의 근대화와 달리 한국의 근대화는 경제성장만 이루었을 뿐 정치적·사회적 근대화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한국은 한편으로는 백의 주장처럼 근대화의 성취로 인한 위협에 다

른 한편으로는 불충분한 근대화로 인해 초래된 위험에 직면한 이중 위험사회(dual-risk society)의 특징을 갖는다. 일례로 벡이 근대산업사회의 위험으로 설명한 관료조직의 무책임성은 한국에서는 정부의 권위주의와 떨어져 이해될 수 없다(Kim, 1998).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이론학계의 위험사회 개념 수용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먼저 한국의 사회이론가들은 위험사회론을 받아들이면서도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 서구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위험사회의 양상의 독특한 성격을 부각시켜 왔다. 이는 벡의 위험사회론이 서구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전근대 → 근대 → 성찰적 근대’로의 단선적인 경로를 상정한다는 비판을 상기시킨다(Urry, 2004). 한국사회의 예는 이러한 비판에 구체성을 더하며 위험사회를 역사적으로 맥락화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최근 벡 역시 세계위험사회론과 세계시민주의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한상진, 2008a; Beck and Grande, 2010; Beck and Willms, 2004). 또한 한국의 사회이론가들은 벡이 다른 환경문제나 대형기술사고와 같은 과학기술 관련 위험뿐 아니라 금융, 범죄, 부패 등 사회전반의 위험을 같은 위험사회라는 개념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한국사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데 벡의 개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가 주목했던 지역, 시간, 사회적 경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과 이로부터 파생한 현대사회의 독특한 성격을 논의하는 데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의 사회이론가들은 현대사회의 성격을 설명하는 추상적 이론으로서 벡의 개념과 이론을 수용했다기보다 서구와 구분되는 ‘한국사회’의 독특한 성격을 규정하고 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 위험사회 개념을 이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2.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와 위험사회의 하위정치

위험사회론에 대한 한국사회학계의 관심은 꾸준했지만 복합위험사회, 돌진적 근대화, 이중위험사회 등의 개념에서 보듯 대체로 구체적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도구라기보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특징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널리 수용되어 왔다. 반면 사례연구나 경험적 연구에서는 위험사회라는 개념은 위험이라는 주제의 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해 상징적 개념으로 동원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연구를 인도하거나 핵심적인 분석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던 중 위험사회론이 2008년 광우병 파동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핵심적인 이론으로 이용되면서 백의 개념과 이론이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된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발표되면서 수입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로 인한 전국적인 촛불시위가 그 해 여름을 달구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및 수입조건에 대한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는 이전의 거리시위나 사회운동과는 여러모로 성격이 달랐다. 무엇보다 먹거리 위험이라는 시위의 주된 촉발요인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정치적인 내용이었다. 또한 시위 참여의 주체 역시 중고등 학생과 주부 등 평소 비정치적인 성향의 다양한 집단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참여 방법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성과 적극성이 두드러졌고 평화적이고 축제적인 형식이 강조되었다.

백의 개념과 이론은 이러한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의 새로운 특징들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도구로 널리 수용되었다(정태석, 2009; J. Kim, 2014). 대표적으로 정태석(2009)은 광우병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이 촛불집회를 통한 광범위한 연대를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를 위험사회론의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불안의 연대’로

설명한다. 위험사회론의 중심 테제의 하나는 산업사회에서 물질의 생산과 분배와 연관된 ‘결핍의 연대’가 사회갈등의 주축이었다면 위험사회에서는 환경, 건강, 생명 등과 연관된 ‘불안의 연대’가 사회갈등의 주축을 이룬다는 것이다. 정태석은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를 벡이 말한 불안의 연대가 한국사회에서 표출된 사건이자, 한국의 사회구조가 위험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먹거리가 산업적으로 대량생산되고 글로벌한 무역의 대상이 되면서 각종 질병이나 위해물질들이 지구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자각과 불안이 평소 비정치적인 영역이었던 식품안전을 정치화한 사건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라는 것이다. 또한 광우병 파동은 하위정치의 예를 보여준다. 벡은 식품안전 같은 생활밀착형 주제들이 성찰적 근대사회에서는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전통적인 정치제도에서 흡수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하위정치를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촛불집회는 한국사회에도 벡의 주장처럼 새로운 가치와 요구가 하위정치의 쟁점으로 등장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정태석, 2008: 256-259).

김종영 역시 벡의 위험사회론을 수용해 2008년의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를 설명한다. 그는 위험사회에서 전통적인 정치가 예측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다루는데 실패하면서 사회운동이 중심이 된 새로운 정치의 장이 열리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위험정치에서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국가 관료와 전문가에 의해 지배되던 전통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도전하면서 위험을 정의하는 정치적 투쟁에 직접 참여한다.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를 이끈 위험정치의 핵심은 “누가 광우병 위험을 정의할 것인가?”라는 위험정의를 둘러싼 투쟁

이었고 또 이 투쟁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김종영은 정태석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는 위험정치가 처음으로 한국의 정치사에 중요하게 등장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J. Kim, 2014: 232).

이처럼 백의 위험사회, 위험정치, 하위정치, 불안의 연대와 같은 개념들은 2008년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를 설명하는 주요 개념들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사회구조변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를 백이 주장한 하위정치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일부 학자들은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가 광우병 위험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2008년의 광범위한 시위를 10년간의 진보적 정권에서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으로 국가권력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보수적인 정책들에 대한 대중의 저항과 떨어져서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광우병 반대 시위를 놓고 벌어진 소위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의 전면적인 충돌은 이러한 전통적인 정치갈등을 잘 표현해준다(Lee, Kim and Wainwright, 2010). 어떤 면에서 백이 말한 위험사회의 정치갈등과 전통적인 산업사회의 정치갈등이 동시에 표출되는 것이 한국적 위험갈등의 특징일 수 있는 것이다(Bak, 2014).

3. 위험인식과 위험지위의 차이와 보편성

한국의 사회학계에서 백의 위험사회론이 진지하게 수용된 또 하나의 영역은 위험인식 및 위험지위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한국 사회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갈등이 과연 백이 위험사회론에 주장한 새로운 사회구조의 표현

으로 이해해야 할지 아니면 전통적인 보수-진보 갈등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즉 현대사회에서 기술위험의 영향과 이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경계를 뛰어 넘는다는 위험사회론의 주장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영역은 식품 위험 인식에 대한 연구이다. 김철규 등은 현대의 먹거리 위험은 자연재해나 우연한 사고라기보다, 효율성을 위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 농식품체계(modern agri-food system)” 혹은 “글로벌 기업식량체제(global corporate food regime)”라는 합리적 현대성의 산물이며, 위치와 장소를 규정할 수 없고 계산과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글로벌 위험의 특징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벡의 통찰력이 잘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현대 농식품체계에서 식품은 초국적 농식품기업에 의해 과학기술을 매개로 생육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형태로 생산되고, 방부제 등 각종 인공첨가제가 첨가된 가공식품의 형태로 공급되며, 식품안전의 책임을 국가가 아니라 시장기제와 개인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관리되는데, 이러한 특징들이 먹거리를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것이다(김철규·윤병선·김홍주, 2012: 16-20). 이들은 또한 먹거리 위험을 둘러싼 위험정치를 이러한 현대 농식품체계가 초래한 위험에 대한 대중의 성찰이 고양되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한다(이해진,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대중의 먹거리 위험에 대한 인식과 위험지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김선업 등은 벡의 위험사회론을 위험을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구성주의적 입장으로 해석하는데, 그에 따르면 위험사회론은 “위험에 대한 인식과 감정은 물론 위험에 대한 대응양식이 사회적 자원을 축으로 내적 분화가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김선업·이해진·이철, 2013: 12). 이러한 해석에 근거

해 이들은 위험에 대한 인식과 위험감수행동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먹거리 위험 인식 - 대안 먹거리 인지도 - 은 교육수준에 비례해 커지는 반면 위험 회피 행동 - 대안 먹거리 소비의향과 대안 먹거리 소비 행위 - 은 소득수준에 따라 커진다고 보고한다(김선업·로렌스, 2012; 김선업·이해진·이철, 2013).¹⁾ 유사하게 박희제는 한국에서 식품안전문제를 둘러싼 위험정치가 백의 주장처럼 진보-보수의 사회적 경계를 넘는 삶의 정치 또는 하위정치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처럼 상대적으로 정치적 쟁점으로 불거지지 않은 식품위험의 경우 진보-보수라는 정치적 성향이 이에 대한 수용도나 구매행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삶의 정치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정치적 성향에 따른 광우병 우려도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 광우병 논쟁을 단지 생활정치의 표현으로만 볼 수 없다(박희제, 2012, 2013).

그러나 위험인식과 위험지위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백의 개념과 이론은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위치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즉 앞의 예에서 위험사회론이 한국사회 또는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의 성격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이론들로 이용된 반면, 위험인식 연구에서는 연구전체를 인도한다기보다 각 연구가 다루고 있는 여러 연구 질문들 중 하나의 가설을 도출하고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데 머물고 있다.

1) 물론 이들의 주장은 백의 위험사회론 중 성찰성과 위험인식의 상대성에 관한 논의를 연구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것이 백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듯이 백 역시 글로벌 위험사회론으로 이론을 발전시키며 구성주의적 입장을 강화하고 위험의 사회적 취약성을 강조하고 있다.

IV. 과학기술학과 세계시민주의적 위험 거버넌스 연구의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벡의 연구는 한국사회학계에 활발히 소개되어왔고 많은 연구자들이 그의 개념과 이론을 수용해 한국사회를 분석해왔다. 그러나 대체로 벡의 위험사회론은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반면, 그의 후기 이론체계인 세계위험사회론이나 세계시민주의론은 한국 사회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은 부분적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의 복합성에 비추어볼 때 세계위험사회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글로벌 위험과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쟁점들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계위험사회와 세계시민주의가 어떻게 경험적으로 연구되어야 할지에 관한 방법론적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벡 스스로가 세계위험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법론적 세계시민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사회학계에서 구체적으로 그가 말한 방법론적 세계시민주의를 적용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한상진(2008b)이 다양한 위험에 대한 한국인의 감수성을 국민의 식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국의 경우와 비교해 설명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이를 세계위험사회에 대한 연구라거나 방법론적 세계시민주의를 적용한 연구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벡의 세계시민주의 시각은 단지 위험인식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시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세계주의적 힘이 각국 내부의 제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초점이기 때문이다(한상진, 2008a; Beck, 2006b; Beck and Willms, 2004).

지구화의 진행과 함께 한국의 많은 사회현상이 한국 내의 정치사

회적 요인들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구태여 세계위험사회를 논하지 않더라도 위험문제 역시 국제사회의 세계주의적 힘과 국내의 정치사회적 힘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따라서 위험 거버넌스 구축에도 국가 안과 국제사회를 연결시킨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는 드물 것이다. 이에 비록 백의 개념이나 이론을 명시적으로 핵심적인 이론자원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험문제를 세계시민주의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는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분야의 연구들을 소개함으로써 어떻게 세계시민주의적 사회학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1. 정책의 글로벌리제이션 연구

한국의 위험 거버넌스를 세계시민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돕는 흥미로운 연구 중 하나는 과학기술에 의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과학기술규제정책의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에 관한 연구다(E. Kim, 2014). 글로벌리제이션은 세계화 과정에서 동질화(homogenization)와 이질화(heterogenization)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이다. 지식의 수입국인 한국은 규제분야에서도 국제적 규범을 만드는 선진국의 제도를 수입하고 따라서 한국의 규제제도의 이름, 유형, 종류 등에서 선진국의 것들과 유사성을 갖는다. 특히 세계화의 진척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들은 선진국의 이해와 경험을 반영한 규제제도를 규범화해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이 표준화된 규제를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국제표준은 제도적으로 작동되는 세계주의적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며, 한국 역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국제표준에 따른 규제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처럼 국제표준이 정책화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각 국가 내부의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 기존 제도의 경로의존성,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제약은 실제로 만들어지고 실천되는 제도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형식적으로는 동질적인 제도라도 그 실천과정에서 차이를 보이는 실질적 이질성이 발생하게 된다(박희제 · 김은성 · 김종영, 2014).

예를 들어 한국은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정책으로 사전 고지된 동의, 조기 경보시스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등 사전예방원칙이라는 국제규준에 따르는 정책들을 수입해왔다. 사전예방원칙, 자기규제, 시민참여 등은 해외 선진국으로부터 이식된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 규제정책의 적용과정에서 한국은 여전히 전통적인 기술관료주의적 위험통제 정책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는 실질적 동등성에 입각한 위험평가의 수용이나 시민참여가 결여된 정책 결정과정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책을 집행할 자원부족 때문에 한국은 유전자재조합유기체(live modified organism)의 수입검사에서도 위험검증실험을 생략한 채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문헌평가만을 하고 있다(E. Kim, 2014). 이처럼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한국에 수용되면서 국내의 조건들 때문에 실제 집행과정에서 어떤 변용을 겪으며 글로벌리제이션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세계시민주의적 시각에 따른 위험사회 분석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2. 과학의 미래의 예측과 수행성의 정치 연구

유사한 맥락에서 제도이식보다 지식체계의 생산적 권력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지식의 수행성(performativity) 연구이다. 수행성이란 어떤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이 단지 대상을 기술하고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대상 자체를 형성하고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머튼의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역시 수행성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예언이라는 개념은 신념이나 세계관의 역할을 다루는 인상을 주는 반면 수행성 개념은 보다 공식적인 지식체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재정경제학은 단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적 자원이 시공간적으로 할당되고 배열되는 행동을 기술하고 이론화할 뿐 아니라, 다양한 파생상품 시장을 형성시킨다. 따라서 경제학은 단지 수동적으로 경제를 기술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제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경제를 만드는 '엔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MacKenzie, 2008: 12).

이러한 수행성 개념은 벡이 위험사회론을 통해 주장한 현대사회의 성찰적 속성에 대한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벡이 주장하고 있듯 현대사회의 위험은 과학지식에 의해 만들어지고, 과학지식에 의해 표현되며, 그 위험에 대한 성찰성 역시 과학지식에 의해 매개되는 경향이 있다. 수행성 개념은 특히 이러한 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도 유용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위험을 재앙에 대한 예견이라고 할 때 기후변화의 예에서 보듯 그 예견은 무엇보다 기후과학이라는 지식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위험은 이에 대처하는 노력을 제도화해 기후 자체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탄소세와 탄소거래시장은 경제학자들이 생산해낸 이론적 지식이 존재하지 않던 시장을 실재하는 현실로

만든 예로 지식의 수행성을 잘 보여준다. 이때 기후변화정책의 기초가 된 기후과학이나 탄소거래시장을 만든 경제학은 한 사회가 독점할 수 있는 지식체계가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생산되는 지식이다. 따라서 수행성 연구는 지구적으로 생산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 세계주의적 힘으로 각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각 국가의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이 만들어지는 정치과정을 탐구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조류독감, 광우병 등 글로벌 위험에 대한 '지식'이 한국이라는 맥락에서 지식정치와 제도화를 통해 현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 역시 위험사회론을 세계시민주의적 시각으로 발전시키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위험정치에서 국제기구의 역할

벡의 이론에서 과학지식과 전문가는 위험정의를 둘러싼 위험정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과학지식과 전문가 역시 위계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제기구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연구기관과 제3세계 국가의 규제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위험을 정의할 수 있는 권력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특히 글로벌 위험사회에서 국제협약에 의해 정당성을 위임받은 국제기구가 특정 위험에 대해 내리는 정의는 국제협약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강제력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위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개별 국가에서의 위험정치에서 세계주의적 힘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일례로 2008년 광우병 파동은 단지 국내의 위험문제가 아니라 WTO와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이하 OIE)이라는 국제기관이 보이지 않게 논쟁에 깊이 개입된 사건이다. 2007년

OIE가 미국에게 광우병과 관련해 “통제된 위험지위(controlled risk status)”를 부여한 위험평가 결과는 한미 간의 쇠고기 수입 협상의 근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시민사회의 저항에 맞서 한국정부가 쇠고기 개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다. OIE는 국제적인 과학자들의 판단을 대표하며 WTO에 의해 가축무역의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OIE의 결정에 반하는 수입거부는 보호주의 목적의 무역장벽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하대청(2014)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담론이 한국의 WTO 가입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과 2006년 이후 추진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체결 협상과 떨어져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영세농 중심의 한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한국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려고 노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은 1980년대부터 쇠고기 수출국들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그 후신인 WTO 제소를 불러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쇠고기 수입 분쟁은 해묵은 분쟁이었고 광우병 위험 논쟁은 쇠고기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개방-보호 담론’이 ‘위험-안전’ 담론과 새롭게 결합되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특히 FTA 같은 위로부터의 지구화는 반지구화 담론 역시 강화시켰는데 이렇게 강화된 대항지식과 대항담론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부각시켜 대중들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광우병 위험’이라는 문제틀 속에서 인식하도록 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문제는 단지 보건과 건강 문제를 둘러싼 국내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장벽없는 교역을 추구하는 WTO와 국제표준제정기구의 정치적 권력이 한국사회에 강압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하대청, 2014: 241). 이처럼 국제기구들이 국내 위험정의 논쟁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세계시민주의적 시각에서 글로벌 위험을 다루는 또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

V. 맺는 말

지금까지 벡의 위험사회론이 세계위험사회론과 세계시민주의로 발전하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소개하고, 벡의 개념과 이론을 수용해 한국사회의 위험을 이론화하거나 또는 경험적으로 연구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일련의 대형 사고와 재정위기가 발발하며 한국사회에 대한 성찰적 조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위험사회라는 개념은 한국사회를 분석할 새로운 개념과 이론을 찾고 있던 사회학자들에게 중요한 이론적 도구를 제공해 주었다. 한편 한국의 사회학은 위험사회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경험에 비추어 위험사회론에 역사적 맥락성을 부여하면서 이론의 수정을 촉진했다. 이는 벡의 후기 이론체계인 세계시민사회론의 핵심적 주장과 맞물려, 2008년 한국을 방문한 벡이 한국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이론을 수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결과를 낳았다(한상진, 2008: 38). 이처럼 위험사회론의 발전은 한국 사회학과 세계적인 사회학 이론이 상보적으로 교류한 좋은 예라 할 것이다.

반면 그의 후기 이론체계인 글로벌 위험사회론이나 세계시민주의 개념은 아직 한국 사회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글로벌 위험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부와 국제사회를 연결시켜 위험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작업은 방법론적 세계시민주의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과학기술학의 최근 논의를 빌어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규제정책의 변용을 살펴볼 것과 수행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미래 예측의 지식정치를 살펴볼 것, 그리고 위험정치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론적·방법론적 시도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것이 백의 이론과의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사회이론의 발전뿐 아니라 실천적으로 한국 사회의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선업·이해진·이 철. 2013. “한·일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과 대안 먹거리에 대한 인식 및 소비성향 비교.” 『농촌사회』 23(1): 7-48.
- 김선업·제프리 로렌스. 2012. “위험사회에서 먹거리 소비 양식의 사회경제적 분화.” 『경제와사회』 96: 77-111.
- 김철규·윤병선·김홍주. 2012. “먹거리 위험사회의 구조와 동학: 식량 보장과 식품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96: 12-42.
- 노진철. 2010.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사회학』. 한울아카데미.
- 박희제. 2012. “한국인의 광우병 위험인식과 위험회피행동.” 『농촌사회』 22(1): 311-341.
- _____. 2013.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수용도: 제도 신뢰의 영향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23(1): 327-367.
- 박희제·김은성·김종영. 2014.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과학기술학연구』 14(2) (출간예정)
- 송재룡. 2010. “울리히 벡의 코스모폴리탄 비전과 그 한계: 공동체주의

- 입장에서.” 『현상과인식』 34(4): 93-119.
- 이해진. 2012. “소비자에서 먹거리 시민으로.” 『경제와사회』 96: 43-76.
- 이홍균. 2009. “울리히 벡의 “성찰적 근대화론” 비판-성장의 사회 압력에 의한 행위의 관점에서.” 『담론201』 12(1): 133-159.
- 임현진 외. 2002.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경섭. 1998. “압축적 근대성과 복합위험사회.” 『비교사회』 2: 371-414.
- 정태석. 2009.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에서 사회구조적 변화 읽기: 불안의 연대, 위험사회, 시장의 정치.” 『경제와사회』 81: 251-272.
- 하대청. 2014. “위로부터의 지구화와 위험담론의 역사적 구성.” 『ECO』 18(1): 235-278.
- 한상진. 1998. “왜 위험사회인가? 한국사회의 자기반성.” 『사상』 38: 3-25.
- _____. 2008a. “울리히 벡-한상진 대담: 위험사회 여는 코스모폴리탄 전망.” 『사회비평』 39: 141-155.
- _____. 2008b. “위험사회 분석과 비판이론: 울리히 벡의 서울 강의와 한국 사회.” 『사회와 이론』 12(1): 37-72.
- Bak, Hee-Je. 2014. “The Politics of Technoscience in Korea: From State Policy to Social Movement.”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8(2): 159-174.
- Beck, U. 1992. “From Industrial Society to the Risk Society: Questions of Survival, Social Structure and Ecological Enlightenment.” pp. 97-123 in *Cultural Theory and Cultural Change 1992*, edited by M. Featherstone. London: Sage.
- _____. 1992. *Risk Society: Toward a New Modernity*. Thousand Oak, CA: Sage (홍성태 역. 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새물결.)
- _____. 1995. *Ecological Enlightenment*. Amherst, NY: Prometheus Books.

- _____. 2006a. "Living in the world risk society." *Economy and Society* 35(3): 329-345.
- _____. 2006b. *Cosmopolitan Vision*. Cambridge: Polity.
- _____. 2008. *Weltrisikogesellschaft: Auf der Suche nach der verlorenen Sicherheit*.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박미애 · 이진우 역. 2010. 『글로벌 위험사회』. 도서출판 길).
- _____. A. Giddens and S. Lash. 1994.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Cambridge: Polity.
- _____ and E. Grande. 2010. "Varieties of second modernity: the cosmopolitan turn in social and political theory and research."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409-443.
- _____ and H. Willms. 2004. *Conversation with Ulrich Beck*. Cambridge: Polity.
- Bronner, S. E. 1995. "Ecology, Politics, and Risk: The Social Theory of Ulrich Beck." *Capitalism-Nature-Socialism* 6(1): 67-86.
- Chang, Kyung-Sub. 1999. "Compressed Modernity and Its Discontents: South Korean Society in Transition." *Economy and Society* 28(1): 30-55.
- Han, Sang-Jin. 1998. "The Korean Path to Modernization and Risk Society." *Korea Journal* 38(1): 5-27.
- Kim, Dae Hwan. 1998. "Rush-To Growth, Economic Crisis, Limping Modernization, and a Dual Risk Society." *Korea Journal* 38(1): 28-45.
- Kim, Eun-Sung. 2014. "Technocratic precautionary principle: Korean risk governance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New Genetics and Society* 33(2): 204-224.
- Kim, Jongyoung. 2014. "The Networked Public, Multitentacled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ve Expertise: US Beef and the Korean Candlelight Protest."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8(2): 229-252.

- Lee, Seung-Ook, Sook-Jin Kim, and J. Wainwright. 2010. "Mad Cow Militancy: Neoliberal Hegemony and Social Resistance in South Korea." *Political Geography* 29: 359-369.
- MacKenzie, D. 2008. *An Engine, Not a Camera: How Financial Models Shape Markets*. Cambridge, MA: MIT Press.
- Mythen, G. 2004. *Ulrich Beck: A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Risk Society*. Sidmouth: Pluto Press.
- Urry, J. 2004. "Introduction: Thinking Society Anew." pp. 1-10 in *Conversation with Ulrich Beck 2004*, U. Beck and H. Willms. London: Polity Press.

박희제는 미국 위스콘신주립대(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과학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과학기술사회학과 환경사회학이며, 최근 발표 논문으로 "How do scientists respond to performance-based incentives? Evidence from South Korea"(in press), "The Politics of Technoscience in Korea: From State Policy to Social Movement"(2014), "전문성은 광우병 위험인식의 결정요인이었나?"(2013), "누가 기후변화회의론자인가?"(2012) 등이 있다.

E-mail: hbak@khu.ac.kr

(2014.11.20.접수; 2014.12.18.수정; 2014.12.22.채택)

From Risk Society to Cosmopolitanism: Ulrich Beck's Vision on Risk Governance and Korean Sociology

Bak, Hee-Je. Kyung Hee University

Key Words: risk society, cosmopolitanism, technological risks, risk governance, performativity

{Abstract}

Ulrich Beck has characterized modern society as risk society in which risks are mediated by science & technology and social institutions. This paper explains the changes in Beck's ideas as he has moved from the theory of risk society to the theory of global risk society and cosmopolitanism and also examines how Korean sociologists have studied risks in Korea using his concepts and theories. In the 1990s, a series of disastrous incidents and national financial crisis forced Koreans to look at Korean society reflexively. The concept of risk society was therefore embraced warmly by Korean sociologists who looked for new concepts and theories to analyze the risks Korean society was facing. Korean sociologists, however, did not merely adopt the theory of risk society. They underscored unique experiences of Korea and, in so doing, highlighted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theory of risk society, which fostered modification of the theory. By contrast, Beck's recent development of theories of the global risk society and cosmopolitanism failed to have much impact on Korean sociology. To enhance research on global risks from the perspective of cosmopolitanism, this paper highlights three potential research areas in science & technology studies (STS) which include research on globa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regulation policies, research on performativity of knowledge and prediction, and research on the roles of international institutes in domestic risk politics.